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김항원 · 강근형\*

目	次
I. 서론	IV.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분석 및 문제점
II. 미국의 대동북아정책	V. 통일교육의 과제
III.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의 통일	VI. 결 론

## I. 서론

제2차대전 이후 냉전질서가 강화되면서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되었고,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지원하에서 국가 발전을 모색해 왔다. 반면에 북한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에 편입되어 소련의 지원하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소련, 중국이 남북한을 축으로 경쟁과 갈등을 지속·강화하는 냉전의 첨예한 결전장이 되어 왔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냉전이 열전이 되기도 했으며, 한국전은 어느 쪽의 승리도 가져다 주지 않은 채 양측간의 갈등의 골만을 더욱 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양측의 경쟁 결과는 이제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변화는 물론이고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해 온 한국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경제를 힘써 온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산체제의 와해로 초래된 냉전의 종식은 전 세계에 걸쳐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와 민주화의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다만 북한 체제만은 아직 긴 동면에서 깨어나지 않아 여전히 냉전적 태도를 표명하며

\* 이 논문은 1995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만 영원히 예외의 지역으로 머무를 수 있겠는가? 북한도 머지않아 체제내적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정책도 냉전 종식 이후에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가장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정책이 과거 냉전시대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있어 미국의 역할은 어떤 다른 국가들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냉전시대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공산세력의 확대 견제,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의 출현 억제,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실현을 통한 미국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차원에서 표출되어 왔다. 한국이 시장경제에 입각한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하여 북한 공산주의와의 첨예한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에게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셈이었다.

이제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한국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 저해될 지 모르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보다는 긴장완화를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배제하기 보다는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권 내에 두어야 한다. 즉, ‘북한포용전략’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과거 미국의 정책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분석해 보려는 이 글의 목적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정책 못지 않게 2세들을 위한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통일교육은 대북한 승리를 위한 반공 내지는 승공통일교육에 치중한 점이 많다. 이제 냉전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반공이나 승공보다는 남북한이 화합하여 민족을 번영시키려는 차원에서의 민족화해교육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점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 이글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제2장과 3장에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이 왜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려 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과거 우리의 통일교육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 통일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행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해 보려 한다.

## II. 미국의 대동북아정책

### 1. 냉전의 종식, 미국 패권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정책

현재의 국제정세는 2차대전 이후 국제관계를 지배해 온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정립되어 가는 일대 전환기라 할 수 있다. 구소련의 붕괴로 야기된 냉전체제의 종식은 불가피하게 냉전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군사면에서의 미국의 유일초강대국의 역할을 담보하면서도, 미국의 경제력의 쇠퇴로 말미암아 경제면에서는 패권이 불확실한 국제정치구조를 노정시키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을 인지함에 있어 대결적 경쟁구조로부터 공존적 경쟁구조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은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소련 및 동구국가들의 체제변화로 야기된 냉전체제의 종식이다.<sup>1)</sup> 이로써 강대국간의 국제관계는 전반적으로 대립과 분쟁을 지양하고 협력과 안정을 기반으로 전개되었으며, 동북아에서도 미국은 소련 및 중국과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안정적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자국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 및 서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미국의 경제력의 약화로 인한 미국 패권의 변화이다.<sup>2)</sup> 197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 미국의 마셜플랜 등 전후 복구사업에 힘입어 새로운 경제강국으로 등장한 서독과 일본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1) 냉전 종식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 참조 John Lewis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Implications, Reconsiderations, Provoc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 133-216; \_\_\_\_\_,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3 (Winter, 1992/93), pp.5-58.

경제면에서의 패권의 쇠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와 그 이후 계속되는 미국 달러화의 약화 현상에서 보여졌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국방력 강화정책은 군사비의 증액으로 인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동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그 적자분을 일본의 대미 투자증가와 공채매입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냉전의 종식과 국가간의 상호의존의 증대로 말미암아 군사력에 입각한 힘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폭력이나 물질로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즉, 설득을 통한 협력이 더욱 요청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곧 국가의 힘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상호의존이 진전된 세계에서는 군사력에 입각한 힘은 그 대체성이 낮아 효용성이 약해지고 있으며,<sup>3)</sup> 오히려 경제력에 입각한 '경제적 시혜능력'과 힘의 연성 자원인 국가적인 지도력이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국가적 결집력, 보편적 문화, 개방성, 레짐결성능력, 국제협력능력, 이념적 지도력 등의 '연성의 힘'(soft power)<sup>4)</sup>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영토의 크기, 자원, 기술수준, 군사력,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지도력 등 여러 측면에서 여타 국가들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미국의 패권에 대체될 새로운 패권세력이 출현할 가능성은

2) 패권(hegemony)이란 어떤 국제질서 속에서 군사·경제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가 각 국가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제도를 결정하고, 자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패권국(hegemon)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전 세계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거나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강력한 경제력이 필요하다. 동맹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 지도력이 요청된다. 동맹체를 구성하고 국제정치경제 관계를 지배할 규칙과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은 중요한 연성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 세가지 패권의 자원 중에서 어느 한 자원이 쇠퇴할 경우에는 패권의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경제력의 자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나, 군사력과 지도력 면에서는 여전히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쇠퇴했다기 보다는 패권이 변화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근형, "국제정치의 성격변화와 패권이론,"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년 12월 14일, pp.3-46 참조.

3) 이 점에 대해서는 David A. Baldwin, "Power Analysis and World Politics: New Trends Versus Old Tendencies," *World Politics*, Vol. 31, No. 2 (January, 1979), pp.165-166 참조.

4)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Inc., 1990), p.188.

약하다. 다만 미국의 경제력의 약화되고 유럽 및 일본의 경제력의 강화됨에 따라, 독일과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현대화 추진으로 고속성장중인 중국과 여전히 강대국으로 자리잡은 러시아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세계질서는 '단일다극구조'(uni-multipolarity)<sup>5)</sup>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냉전이후시기의 단일다극구조 하에서 대외정책 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성의 힘인 지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다만 미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구조의 와해로 주요 세력간 전쟁 위협이 감소된 상황에서 전세계에 걸친 패권을 추구하기 보다는 러시아,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세력간의 합의의 기반 위에서 미국 주도의 공동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과 독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이를 통하여 역할 분담을 통한 유엔 중심의 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국은 주요 세력과의 협력을 통한 유엔의 국제평화 및 안보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주요 세력간의 합의 기반을 도출, 법의 지배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이후시기의 국가안보전략으로서 세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신뢰할만한 안보체제의 확립, 미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이다.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서도 궁극적인 안보의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sup>6)</sup>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냉전시대처럼 한·미, 미·일동맹의 기반 하에서 강력한 군사력으로써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여 관련국들과의 협력과 견제의 기반 위에서 균형자(balancer) 내지는 조정자의 역할을 통

5) 이 점은 Samuel P.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 *Survival*, Vol. 33, No. 1 (January/February, 1991), pp. 3-17 참조. 나이는 단 하나의 위계구조로 다층적 구조를 가진 세계정치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상의 군사적 층에서는 미국에 비견할 만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극구조(unipolar)라고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중간층은 지난 20년 동안 삼극구조였으며, 초극적 상호의존의 최저층은 힘의 분산구조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Joseph S. Nye, Jr.,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p. 88. 레인은 냉전종식이후 미국의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세력이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hristopher Layne, "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reat Powers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Spring, 1993), pp.5-51 참조.

6)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July, 1994, p. 5, p. 23 ;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n-Pacific Region*, February, 1995, pp.1-7.

해 역내 안보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은 집단적 개입주의(collective engagement)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클린턴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반대해 왔던 아시아에서의 집단안보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냉전이후시대에 아·태지역의 새로운 안보문제에 대처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견지하기 위하여 광역적 차원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을 활용하고 있다. 이 기구는 태평양 지역 최초의 폭넓은 기반에 바탕을 둔 안보문제에 관심을 가진 협의체이다. 1994년 7월에 최초의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아세안국가들,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이 참석했다. ARF는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와 더불어 각국 정부의 의도 전달, 긴장완화, 투명성 증진, 신뢰구축, 군비경쟁 억제, 그리고 안보문제에 관한 협의·협력 습관을 기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지역 차원에서는 '동북아협력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를 제의했던 것이다.

이는 1993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발표한 것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의 연설이 "보다 개방된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을 축으로 아·태지역의 공동체 창설을 주장하면서 APEC을 공동체 추진의 중심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 반면,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은 '신태평양공동체'의 안보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구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미국은 이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역내 안보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역내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하에서 미국은 안보면에서 네가지 우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군의 지속적인 역내 주둔이다. 둘째,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노력이다. 셋째, 공동의 안보위협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한 새로운 지역안보대화

7) U.S. President Bill Clinton's Address to National Assembly, July 10, 1993 ; 민족통일연구원,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과 남북한관계," 연구보고서 94-02 (1994년 9월), pp.8-9 참조.

의 모색이다. 넷째, 이 지역 전체에 대하여 보다 개방된 사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한다. 이러한 우선 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클린턴 대통령은 첫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5개 역내국가들과 유지하고 있는 양자적 안보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클린턴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북한의 신형미사일 개발 및 중동지역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생화학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무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지역안보대화의 필요성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소련 위협의 소멸과 함께 등장한 종족분쟁, 지역불안, 난민문제 및 마약과 불법무기 등 냉전이후시대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태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지역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태지역의 지역협력기구는 “다양한 위협과 기회”(multiple threats and opportunities)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multiple new arrangements)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위협과 기회란 북·미·일·중·러 5국 체 해결과정에서의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조, 유엔평화유지군(PKO)의 활동,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분쟁에 대한 신뢰구축 문제 등이다. 넷째,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지역의 일부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의 적용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민주주의의 확산이 국민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을 분석해보면 상기한 냉전이후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내에서 신뢰할만한 안보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군의 지속적인 역내주둔과 아울러 아·태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지역안보기구의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산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중국 및 미얀마 등 비민주주의 국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미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을 주둔시킬 것으로 보인다.<sup>8)</sup> 이러한 미군의 전진 배치를 바탕으로 역내안보를 유지하는 데에 지속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양자간 관계를 중요시 하면서도 다자간 접근방식을 점진적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면에서 APEC의 활성화와 안보면에서 역내안보레짐의 결성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본과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패권 추구를 견제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균형자(balancer)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 지속, 중국과의 관계 확대,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및 북한과의 교섭 강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양자간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자간안보포럼을 활성화함으로써 집단안보에 입각한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2. 미국의 경제정책

제2차대전 이후 경제면의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꾸준히 하락해 왔다. 반면에, 일본 및 서구의 경제는 꾸준히 상승하여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2차대전 직후에는 미국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절대적 우위에 있었다. 물론 이는 서구와 일본의 경제가 전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

8) 1995년 2월 미 국방성이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동아시아에 10만명 정도의 군대를 상주시키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2개 여단으로 편성된 지상군 1개 사단과 1개 전투비행단, 그리고 해병과 1개 항모전단을 상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계속 '참여와 확장'(engagement and enlargement)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이 지역에 자국이 주도하는 안정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결의를 재천명하고 있다.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이상우, "동아시아 평화와 중·일·미·러의 역할," 『신아시아』, 제2권, 제3호 (1995년 가을호), p. 54-55에서 재인용.

조셉 나이 미국방차관보도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은 이 지역 전체에 대해 깊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군의 이 지역에서의 주둔은 동아시아 안보 균형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며, 미국이 이 지역에 개입함으로써 안정을 다지고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낮추고, 패권세력의 등장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oseph S. Nye, Jr., "U.S. must engage Asia in maintaining security and prosperity," prepared statement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June 27, 1995 ; \_\_\_\_\_, "East Asian Security: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5), pp.90-102.

기 때문이다. 그후 일본과 서구의 경제가 부흥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서서히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전전 수준에 이르렀던 1960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컨대, 1960년 이후에도 세계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국민총생산량도 꾸준히 저하되고 있으며, 세계수출총액에서 점유하는 미국의 비율도 1950년에는 20%를 초과하고 있었으나, 70년에는 15%로, 80년대 이후에는 12% 이하로 저하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 경제는 전후 고도 성장의 결과 1950년에는 세계총생산의 대략 3% 미만에 불과했던 국민총생산이 70년에는 7.3%로서 서독을 추월하여 자유진영의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며, 88년에는 엔고의 영향도 추가되어 14.2%로 상승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88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에서 미국을 앞지르게 되었다.<sup>9)</sup>

한편, 제조업에서의 노동생산성 면에서도 일본은 1960년 이후 미국은 물론 유럽보다도 앞서고 있다. 특히, 1960년부터 85년까지 일본은 미국을 월등히 앞섰는데, 60년부터 73년까지는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3.3%인데 비해서 일본은 무려 10.2%를 기록하였다. 그후 79년부터 85년 사이에는 미국이 1.9%인데 비해 일본은 3.9%였으며, 85년부터 90년 사이에는 미국이 3.1%인데 일본은 4.3%였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이 미·일 양국이 노동생산성에서 큰 격차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일본은 급속히 개선·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저하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반영하여 전쟁 직후에는 대폭적인 흑자를 누렸던 미국의 경상수지가 1970년대 후반에는 적자로 전환하였고, 84년 이후는 연간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거액의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은 70년대에 들어서 흑자 기조로 되었고 최근에는 매년 수백억 달러의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sup>11)</sup>

9) 宮里政玄·國際大學日米關係研究所 編, 『日米構造摩擦の研究: 相互干涉の新段階を探る』(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0), pp.30.

10) C. Fred Bergsten and Marcus Noland, *Reconcilable Differences?: United States-Japan Economic Conflict*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3), p.10.

11) 宮里政玄 編, 앞의 책, p.31.

미·일간의 무역수지를 보면, 1960년대 후반 이래 일본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의 대일적자가 연평균 500억 달러 전후에 달해 있다.<sup>12)</sup> 이러한 현상뿐만이 아니라,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첨단 기술부문에 있어서조차도 일본이 미국에 육박하여 추월하는 분야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수년 동안에 이른바 엔고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금융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진출이 놀라운 정도이다.

세계시장에서 어떤 국가가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신장해 갈 경우에 선진공업국 간에 무역마찰이 격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예컨대, 19세기 말부터 금세기 초까지 세계시장에 급속히 진출했던 독일이 당시 최선진국이었던 영국과의 사이에서 격심한 마찰을 일으켰었다.<sup>13)</sup>

이와 같이 일본의 경제력은 급속히 성장하는 반면에, 미국 경제의 패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일 양국간에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미·소간의 냉전종식으로 말미암아 정치·이데올로기 문제보다 경제문제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야기시킴으로써 미·일 무역마찰은 더욱 가열화 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의 목표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접근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는 한편,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관리무역 내지는 전략무역을 대외무역정책의 기조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적자를 줄이고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sup>15)</sup>

국제경쟁력 강화론은 포터(Michael E. Porter), 요피(D. Yoffie), 크루그만(Paul Krugman), 현재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이인 타이슨(Laura D.

12) 1993년에도 미국의 대일적자는 594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대일적자 현황은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Foreign Trade Highlights*, 1993, 1994 참조.

13) 宮里政玄 編, 앞의 책, p.32.

14) 미일 무역마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강근형, "패권이론과 미일관계의 정치경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년, 제4장 참조.

15) 냉전이후시기에 있어서 미국외교정책의 최우선과제는 미국경제의 활성화, 즉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라고 강조하고 있는 정책 천명에 대해서는 Secretary Warren Christopher, "The Strategic Prioriti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Statement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November 4, 1993,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Vol. 4, No. 47 (November 22, 1993), pp.797-798.

Tyson), 자이스만(John Zysman), 그리고 코헨(Steven Cohen) 등에 의해 주창되어 현재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론이다.

포터는 어떤 특정한 국가에 '홈 베이스'(home base)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특정한 분야에서 여타 경쟁자들에 대해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다시말하면, 특정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여타 세계의 경쟁자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창출·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특정한 국가가 그렇게 많은 산업의 세계적인 지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본거지가 되는가? 결국 그 이유는 특정한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국가의 영향력이 생산성 향상의 수준과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스미스나 리카아도 같은 생산비나 부존자원의 우위를 강조하는 고전적인 비교우위의 관점과는 달리, 특정 산업에 있어서의 기업의 성공은 그 국가의 경제적 환경, 제도, 그리고 정책에 달려있다고 포터는 주장한다.<sup>16)</sup>

따라서 산업의 세계화와 기업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은 국가를 초월해 존재하며, 기업의 국제적 성패에 국가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선입관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즉, 경쟁의 세계화는 국가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중요성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특정한 산업부문의 선도 그룹은 경쟁우위를 지원하는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수십년 동안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업에게 특정부문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주는 국가의 결정적인 특징들은 '국가의 경쟁우위'라고 규정되는 것으로서, 이것에는 국가경제구조, 가치, 문화, 제도, 그리고 국가의 역사 등의 요인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경쟁우위론은 기술혁신을 중심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술혁신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다. 국가가 자국 기업이 특정한 산업부문에서 외국 기업보다 신속하게 진보·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sup>17)</sup>

16) Michael E. Porter,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90), pp. 1-2.

17) *Ibid.*, pp. 18-21. 크루그만은 전략무역을 주장하는 바, 그는 자유시장 원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도 특정 첨단 산업분야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 지급 또는 방어적인 보호주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aul R. Krugman (ed.),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A: MIT Press, 1986); E. Helpman and P. Krugman,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1985).

타이슨 등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냉전이후시대의 주요 국가안보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며, 향후 미국의 위상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패권이 아니라 과학기술상의 지도력(technological leadership)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안보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학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기술의 조기 개발과 정부의 체계적·전략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유능한 기초과학 기술교육의 개선과 기술인력의 확보와 전략적 기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한다.<sup>18)</sup> 물론 미국의 연구개발비는 적은 액수는 아니나, 주로 군사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상업부문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전략무역, 그리고 관리무역에 입각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민·관기술협력 강화 등 기술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술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하는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기술의 상용화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늘리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기술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술패권'을 유지하려 한다면, 미국, 일본 및 유럽 사이에는 첨예한 기술경쟁 내지는 기술전쟁도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미상무부가 직접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미국 업체들의 해외수출을 장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정보서비스를 강화하

18) Laura D. Tyson and John Zysman (ed.), *American Industry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Tyson, *Who's Bashing Whom?: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문정인, "세계화의 위협구조와 국가전략: 신중상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계간사상』 (1995년 봄), pp.72-75 참조.

19) 미국의 기술정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President William J. Clinton and Vice President Albert Gore, Jr., *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A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 February 22, 1993 참조.

는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해외시장의 확충을 위해서는 여타 국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익의 우선이란 측면에서 WTO협정보다 슈퍼 301조 등 미국법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일무역정책에 있어서도 부시 행정부의 구조협약(SII)보다 더 강력한 '미일포괄협약'(U. S. -Japan Framework Agreement)을 내놓고 일본의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다.<sup>21)</sup> 이는 미국이 목표명시주의를 도입하여 일본의 품목마다 시장개방의 수치목표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번 클린턴·호소카와 회담에서 일본이 강력하게 'No'를 표명함으로써 일단 포괄협약은 결렬되었다. 결국, 1994년 5월 미·일간에 포괄협약의 재개를 위한 비공식 절충을 거쳐, 1) 동협약을 재개, 우선 세부야를 조속히 협의하며, 2) 미국측은 수치목표는 정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도 정성적·정량적 기준을 함께 활용하여 종합 평가하며, 3) 일본은 경쟁력있는 외국제품의 시장진입·판매증가를 주요 분야별 협의 목적으로 할 것을 재확인했던 것이다.<sup>22)</sup>

그러나 미·일간에는 분야별 협의에서 객관적 기준과 수치목표간의 관계를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되고 있어 미일합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만일 일본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슈퍼 301조를 발동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일간의 무역마찰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1995년 6월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미·일간에 마찰이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양국이 서로 WTO에 제소하겠다고 맞섬으로써 무역전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미·일 무역마찰은 일본 국내산업의 구조 조정의 문제와 맞물려 있고, 또한 미일 양국의 경제제도가 다른 데에 기인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말미암아 한 국가의 패권적 힘의 자원 가운데서 군사력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지도력과 경제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냉전이후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을

20) 뉴스위크는 냉전종식 이후 미국외교정책에서 경제문제가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고, 미국의 해외공관들이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Michael Hirsh and Karen Breslau, "The New Diplomacy: USA, Inc.," *Newsweek*, March 6, 1995, pp.10-17 참조.

21) The White House, *op. cit.*, pp.16-17.

22) 산업연구원, 「KIET 실물경제」, 제31호 (1994년 9월 14일), pp.7-10 참조.

것이다. 이 중에서 경제력은 지도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여타 국가들에 대해 경제원조를 토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3)</sup> 경제능력의 결핍은 국내적으로 좀 더 낮은 수준의 생활수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문명사회임을 보증해주는 의료보호, 어린이 및 노인들을 위한 보호, 그리고 기타 다른 형태의 지원과 같은 정부의 서비스 능력이 점차 저하됨을 의미한다. 대외적으로도 경제능력의 약화는 자국의 안보능력을 감소시킴은 물론, 동맹국을 지원하고 세계의 여러 사건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그 국가의 지도력과 군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특히, 경제적 성취능력의 저하는 미국의 대외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5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국가안보에 있어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군사력이 호전적인 제3세계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는 아직도 유효하지만, 여타 주요 국가들, 즉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그리고 아마도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오히려 경제력이 더 중요해졌다. 다른 하나는 20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주요한 경제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다른 모든 형태의 힘, 즉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외교적, 그리고 문화적 힘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견할 만한 나라가 없으나, 유독 경제적 힘에 있어서는 일본이 미국을 급속하게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력은 주요한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중심 요소이다.<sup>24)</sup>

경제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은 우선 국민들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감소시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패전의 경험이 없고 자원이 풍부하며, 전후 풍요의 시대에 소비가 미덕인 분위기에 익숙해 온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절약이 미덕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은 아마도 경제력의 약화에 기인하는 패권의 쇠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리라 본다. 이미 전략무역이니 산업정책이니 하는 중상주의적 정책들을 채택하고

23) 경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Samuel P. Huntington, "The Economic Renewal of America,"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2), pp. 14-18 참조.

24) *Ibid.*, pp.14-15.

있다. 그리고 공정무역을 내세워 무역상대국의 자국 상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패권국이 쇠퇴할 경우 패권국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압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앞으로 더 이상 호의적인 자유주의적 패권국(benevolent liberal hegemo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중상주의적 태도를 점차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도 속으로는 중상주의적 정책을 서슴치 않고 구사하려 할 것이다. WTO체제가 출범했으면서도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에는 슈퍼 301조를 즉각 적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러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 마당에 더 이상 동맹국들에게 정치적·군사적 이유로 경제적인 양보를 해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어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제안한 바 있는 '동아시아경제협력의체'(EAEC)와 같은 일본 중심의 '배타적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국의 지도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이 바로 APEC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정책은 자유주의의 선도국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한 WTO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중시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지역주의도 WTO의 활동 범위 내에서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옹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기구에도 어디까지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는 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할 것이다. 만약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정무역을 내세워 자국 이익 우위의 중상주의적 정책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미국은 APEC이 '신태평양공동체'를 건설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아·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미국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APEC은 '신태평양공동체'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조직망을 만들고 있으며,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 및 정치 면에서도 미국을 이 지역에 정착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Winston Lord, "Contours of a Pacific Community Are Surfacing," 1995년 1월 12일 샌프란시스코 커먼웰스 클럽에서 행한 로드 미국무차관보의 연설 참조.

그리고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자국의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시장개방을 적극화할 것임을 의미한다.<sup>26)</sup> 그러므로 앞으로 지적소유권 보호, 비관세장벽의 철폐, 자동차시장 개방, 국내시장의 구조개혁 등을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및 여타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마찰을 더욱 가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Ⅲ.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의 통일

#### 1. 미국의 한반도 정책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냉전의 종식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냉전시대와는 다른 정책 전환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소련과 중국 및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하면서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인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적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냉전이후시기에 있어 군사력보다도 경제력과 지도력의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보다도 경제적인 시혜와 지도력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우방국가인 일본 및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력의 약화로 이들 국가와의 경쟁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및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제적인 혜택은 매우 유효하다.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의 전환 과정에 미국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있어 미국의

26)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1996년 1월 5일 '무역협정이행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약속불이행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중 지적재산권보호협정, 미일 음반보호협정, 한미 육류시장개방협정, 그리고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위반 등을 거론했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통상문제의 해결책을 협정체결 자체에서 찾기보다는 협정이행 여부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 1996년 1월 7일 참조

시장과 자본 및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개방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도 미국의 협력은 필요하다. 미국이 직접 원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지도력을 이용하여 서방 선진국들의 원조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북한포용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미관계에도 약간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할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의 통일보다는 오히려 긴장완화를 통한 현상유지를 더 지지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냉전기와는 다르게 정책목표와 전략면에서 상이한 견해가 노정될 수도 있으며, 양국간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등장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미국이 신국제질서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 중대한 문제였다. 핵무기 확산방지를 전쟁 목적으로까지 설정하여 걸프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에게 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냉전이후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졌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책은 분명 핵무기의 현상 동결을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다.<sup>27)</sup> 또한 NPT 속에서도 타당성을 갖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를 요구한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시간 벌기는 물론 핵사찰을 거부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27) 핵확산금지조약은 1968년 7월 1일에 조인되고,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되었다. 1975년 비준을 완료하였고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함으로써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약 전문은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reement 1959-1972*. (June 1, 1972) 참조.

오늘날 핵확산이란 개념은 핵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개발을 넘어선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단 한 번의 핵 폭발'을 핵확산으로 보는 좁은 정의보다는 차츰 광범위하게 고도의 핵 지식의 소유와 핵 물질의 보유 가능성, 핵무기의 조립기술 및 조립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운반수단의 획득, 지휘·통제, 그리고 통신을 포함한 전략 원칙의 정립까지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게 정의되고 있다. Lewis A. Dunn and William H. Overhalt, "The Next Phase of Nuclear Proliferation Research," in William Overhalt (ed.), *Asian Nuclear Future* (Colorado: Westview Press, 1977), pp. 1-2. 오기평, 「한국의외론: 신국제질서와 불확실성의 논리」(서울: 오름, 1994), pp. 339-340에서 재인용.

북한은 1985년 12월에 NPT에 가입한 이래 1992년 1월에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가입하였고, 그 해 4월에 이 협정은 발효되었다.<sup>28)</sup> 이에 앞서 1991년 12월에 남·북한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IAEA의 핵안전협정에 가입한 뒤인 1992년 5월에 임시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찰 결과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고, 이에 따른 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대해 북한은 1993년 3월 12일에 NPT로부터 탈퇴 선언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압력을 낳았고 북한은 그 탈퇴 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6월 11일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 합의한 뒤 "NPT탈퇴를 유보"한다고 선언, NPT의 특수지위를 주장하였다. 그러한 특수지위 속에서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14일에는 IAEA로부터의 탈퇴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한동안 NPT 탈퇴를 유보한 상태에서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IAEA의 사찰단의 임무수행은 인정하는 혼란된 상태에 있었다. 다만 포괄적인 핵안전협정을 파기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IAEA의 사찰 요구에 응할 의무는 배제해 버렸다. IAEA의 특별사찰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오직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카드의 효력을 극대화시키자는 것이었다.<sup>29)</sup> 이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탈냉전적 국제조류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극도의 고립감과 불안 속에서 정권적 안보를 위한 근본적인 선택으로서 복잡하고 정밀한 계산에서 나온 정권적 도박이기에 결코 그 의도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견해이다.<sup>30)</sup> 이는 한국과 일본의 지배적인 강성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를 미국과의 외교협상 카드로 사용함으로써 현재 북한이 부딪치고 있는 안보 및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견해라는 것이다.<sup>31)</sup>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28) 북한의 핵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Michael J. Mazarr, *North Korea and The Bomb: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참조.

29) 오기명, 앞의 책, p.341.

30)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견해는 안병준,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년 여름), pp. 7-22; Byung-joon Ahn, "The Man Who Would Be Kim,"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4), pp.94-108 참조.

31) 이 주장은 김영환, "북미관계개선과 남북관계의 변화," 『통일경제』, 제2호 (1995년 2월), pp.30-47 참조.

이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해 정확하게 간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카드에 대응하는 방법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과거에 대한 핵무기 개발까지를 포함한 완벽한 핵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IAEA의 핵사찰 이후부터의 핵동결로써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핵투명성을 보장 받으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이후 한국내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으며, 한반도에서의 여하한 핵 가능성이라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있어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 및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명분상 북한이 NPT에 잔류하고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선언만으로써도 자국의 정책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 미국의 영향력 속에 북한을 가두어 둘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는 셈이었다. 특히,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수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핵개발 포기 선언은 미국과의 수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것이었다.

결국, 미국은 김일성이 카터 전대통령을 통하여 핵개발 동결 의사를 밝힘에 따라, 1994년 7월 8일 제네바에서 북미 3단계회담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7월 8일 사망함에 따라 북미 3단계회담은 하루만에 연기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8월 5일부터 13일까지 3단계 1차회담을 개최하여 북미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핵 위기 타결의 실마리를 잡아갔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NPT체제에 머무를 것이며, 또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영변 핵연료의 재처리 및 대체를 포함한 모든 핵 활동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의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은 대체 원자력 발전소를 제공해 주며, 상호 외교적 승인의 목표를 향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또한 안보 및 경제적 보장을 제공

해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상안은 1993년 당시와는 매우 다른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한, 그리고 북한의 과거 및 현재의 핵무기 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찰이 실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직접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제 미국의 접근 자세는 전보다 매우 실용적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완전히 없앤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이를 통제 혹은 봉쇄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3단계 2차회담을 1994년 9월 23일 제네바에서 재개하여 10월 21일에 북미간 기본합의문에 합의하였다. '북미간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up>32)</sup>은 1) 경수로 지원 조항, 2) 관계개선 조항, 3) 한반도 비핵화 조항, 4) NPT체제 유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본합의문 중 경수로 지원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2003년까지 2,000MW에 상당하는 경수로를 북한이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6개월안에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한다.

미국은 북한의 흑연감속로 건설 중단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첫번째 경수로 완성시까지 대체에너지를 공급한다.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로 한다. 대체에너지의 공급은 3개월 안에 개시하며 연간 50만 톤까지 공급하기로 한다.

북한은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접수되는 즉시 흑연감속로 가동을 중지하며, 궁극적으로는 흑연감속로와 부속시설들을 해체한다. 북한은 흑연감속로 가동을 1개월 안에 동결한다. 북한은 IAEA가 핵동결을 감시하는 데 협조한다. 흑연감속로의 해체는 경수로 건설이 완성되는 시점에 완결한다. 미국과 북한은 5MW 실험용원자로에서 추출된 폐연료봉의 안전한 저장방법을 강구하며, 경수로 건설

32) 이것의 전문은 오기평, 앞의 책, 부록 5, pp. 454-461 참조.

기간 중에 폐연료봉을 폐기하도록 한다. 미국과 북한은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제 공문제 관련 전문가 회담 및 폐연료봉의 처리와 폐기 관련 전문가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한다.

둘째, 관계개선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안에 양측은 금융거래 및 통신을 포함한 투자와 무역상의 장벽을 낮추기로 한다. 양측은 영사 및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회담을 개최하여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해결이 진전될 경우, 미국과 북한은 양자관계를 대사급까지 격상 한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협조한다. 미국은 대북한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을 공식 적으로 확약한다.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양측 은 본 합의문이 남북대화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남북대화를 재개한다.

넷째, NPT체제 유지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NPT체제 강 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북한은 NPT체제의 일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안전협정의 이행을 수락한다. 경수로 사업의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IAEA의 동결시설을 포 함한 부대시설에 대한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지원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시점, 즉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이전에 북한은 IAEA와의 안전협정에 근거하여 북한 내의 모든 핵시설과 북한의 핵시설 관련 초기보 고서에 대한 정확도 및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완전한 사찰이 이행되도록 한다.

이 합의문의 주요 내용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흑연감속로 대신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콘소시엄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 의 완성 시기까지 북한의 연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미국은 발전용 중유 제공을 약속하였다. 이의 대가로 북한은 국제사찰을 받고 있던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며, 훗날 에는 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였다. 두번째로 양측은 상호교역과 접촉의 장애 물을 제거하고, 장차 상호간 외교적 승인을 도출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는 데 합의하고, 그 구체적

조치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보장하며, 북한은 남한과의 협상과 접촉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NPT체제에 계속 잔류하며, 본 합의 사항들이 실현될 경우에는 자신의 핵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번 합의의 가장 독특한 점은 '단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성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핵개발 계획을 상당기간 동안 감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남북한 접촉과 협상의 재개 요건이 구체적인 시간표나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3)</sup>

현재까지 이 기본 틀은 구체적 조치들로 이어져 왔다. 북한내 경수로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라는 국제콘소시엄이 조직되어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건설비용을 지원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게 5만톤의 증유(약 5백만 달러의 비용 소요)를 제공하였다. 또한 양 측은 상호간 투자 및 교역 제한을 완화하였고, 북한 핵개발 계획의 동결을 위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으며, 외교적 승인을 목적으로 한 중간 조치들에 대한 회담이 열렸다. 1994년 12월에 발생한 미군 헬기 사건을 리차드슨 하원의원, 허버드 미국무부 부차관보와 북한간 정치회담을 통하여 해결한 바 있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간 적절한 접촉 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sup>34)</sup>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미간 합의문은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게 해 주었고,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경제 지원과 안보를 확약받게 됨으로써 핵카드의 유용성을 십분 얻을 수 있었다. 미국도 클린턴 행정부가 이것을 외교업적으로 내세워 국내선거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1995년의 NPT 연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핵확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수교에 대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33) 제임스 컷튼, "북미간 핵 합의의 배경," 『통일경제』, 제12호 (1995년 12월), p. 4.

34) 통일원, 『주간북한동향』, 제209호 (1994. 12), pp. 25-31 참조.

그러나 이 합의문이 주는 한국에 대한 부담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우선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회담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합의안들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한국이 계속 주장해 왔던 북한 핵의 과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고, 북한 핵의 현재와 미래를 동결하는 데 만족해 하는 미국의 주장에 한국의 주장은 결국 용해되어 버렸다.

이는 그 동안 북한에 대해 견지하고 있던 한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간 합의 내용 중에 남북대화 재개 요건이 포함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북한에 대한 원조 제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합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대조적이다. 북한은 이후 한번도 한국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고, 한반도 문제 처리에 있어 한국을 배제시켜 기선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한국은 KEDO 내에서 북한의 경수로 지원 비용의 상당 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약 40억 달러로 추산되는 총 비용 중 절반 이상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면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할 것이다. 한국내의 야당은 물론 국내여론도 합의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해 부정적이다. 즉,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합의안에 무조건 돈만 낸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한국으로서는 무억마찰을 둘러싸고 한국 내에 반미감정이 점고되고, 오랜 기간동안 미군의 주둔으로 민족적 자존심이 훼손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국내 여론을 지극히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한미간에 미묘한 기류를 자아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미간 합의를 수용하는 게 이외에 어떤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합의를 거부한다면, 한미간의 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훨씬 큰 마당에 한국 정부의 선택은 미국의 주장을 지지할 수 밖에 다른 방책이 없었던 것이다.

## 2.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

주지하다시피 냉전이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국가이익은 그 우선 순위에서 있어 첫째는 세계적인 핵확산금지이고, 둘째가 지역안정 및 평화이며, 셋째가 국지분쟁 해결이다. 그러나 중진국으로서 한국의 국가이익은 우선 순위에서 그 첫째가 북한에 의한 핵무기 및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둘째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이고, 셋째가 세계적 핵확산금지이다.<sup>35)</sup> 냉전시에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우리의 국지전략은 일치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외교 및 전략을 추종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 자신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대북한전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을 성공시켜 세계적인 핵확산방지와 NPT의 갱신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네바합의를 서둘러 타결했다.<sup>36)</sup> 그 결과 미국은 북한핵의 과거 행동, 남북대화, 재래식 군사대결 및 한국형 경수로에 애매모호하게 남겨둔 채 북한이 핵동결만 지킨다면 중유공급,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동결을 위하여 북한과 계속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sup>37)</sup>

한반도 안보의 초석이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미간의 마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무역

35) 안병준, 앞의 글, p.9.

36) Mazarr, *op. cit.*, pp.181-204 참조.

37)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2단계 완화조치를 실시하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소규모 직접투자 및 교역 허용,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 그리고 대북송금규모 확대 및 이를 위한 일부 관련규정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2백만 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과 테러집단에서의 북한 체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1996년 1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하와이에서의 한·미·일간의 합의사항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1996년 2월 5일, 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의하면 1995년 11월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에 극비로 합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미국이 대북경제조치 완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은 우성호 선원의 송환, 미군 병사(MIA)의 유해 수색 및 반환에 합의, 그리고 애틀란타 올림픽에의 참가를 표명했다고 한다. 『讀賣新聞』, 1996년 1월 6일 참조.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마찰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한 공조체제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반도의 안보를 다지는 것은 통일에의 전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은 무력을 통한 통일이라도 “통일만 되면 되지 않느냐”는 통일지상주의적 발상을 경계해야 한다. 무력 통일은 그 동안 이루어 온 민족의 발전 토대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실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통일이 민족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미안보체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확고부동함을 미국은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sup>38)</sup> 한미 양국은 안보 및 정치적인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냉전이후에도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점이 많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견해와는 약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그것은 한마디로 ‘북한포용전략’이라 할 수 있는 바,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어 그 호전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북미수교가 필요하므로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남북대화를 그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39)</sup> 이른바, “선북미수교, 후남북대화중용”의 시나리오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국 정부도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다만 미국의 대북수교는 남북대화가 선행된 이후라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 “선남북대화, 후북미수교”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북미수교가 이루어 진다면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북한에게 유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의 ‘남한배제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미국은 남북대화와 대북협상을 병행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지만, 범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접근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38) James T. Laney, “The ROK-U.S. Relationship and the Test of Time,” Speeches in the Seoul Forum, November 22, 1994 참조.

39)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는 남북대화를 북한의 대미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만들려는 과거의 노력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보고, 남북한 상호관여(engagement)의 유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미협상은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James T. Laney, “North Korea: What’s the Problem, What’s the Answer?” Speeches in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East Asian Center, April 17, 1995 참조.

단기적으로 보면 북미협상이나 더 나아가 북미수교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실패요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일런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제네바 북미협약의 이후 북한은 자신의 핵시설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기술, 전문가 및 물품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또한 핵무기 전용 가능한 물질의 실험 계획을 포기해야만 한다. 자신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국제적 사찰과는 별도로, 지금까지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외부의 영향을 받아 오던 북한의 경제 및 사회체제 내에서 해외의 요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북한 엘리트들은 경제 개방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sup>40)</sup>

경제개혁이 적극 추진된다면 안보 문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점이 중요하다. 무기개발은 해외원조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대결이라는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을 코너를 모는 '북한고사전략'은 고도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모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피해야 한다. 북한을 고립시키지 말고 좀 더 유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주류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한국에게도 유리하다. 북미협상과 북미수교는 이러한 방향으로 북한을 개방시키는 데 순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북미수교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사전 협의는 매우 필요하며 미국은 한국을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북미수교 과정에서 북한이 조건으로 내 걸 가능성이 많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sup>41)</sup>으로의 대체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명백히 반대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북한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개입을

40) 제임스 컷튼, 앞의 글, p. 16.

41)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협의할 협상을 시작할 것을 미국에게 제의한 바 있다. 자세한 분석은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세미나 시리즈 95-01 (1995. 6. 21) 참조.

차단하려는 것이 이 협정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 진다면,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도 성사될 것이므로 한반도에서는 명실공히 미·일·중·러의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완료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기존의 미·일과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한 토대 위에서 중·러와의 관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4강은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일외교’가 요청된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장치, 교류협력 및 통일에 대한 국가전략과 원칙을 명백히 하여 초당적으로 통일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정부간 공식외교 채널뿐만이 아니라 의회, 언론 및 민간여론 선도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한국의 정책을 널리 알려 다양한 지지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은 모든 나라가 민주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대해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며 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을 여러 방면에서 추진하면서도, 남북관계 및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남북대화 추진을 위한 끈질긴 노력이 매우 요청된다.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주변 4강과의 외교적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하고 채찍보다는 당근을 통한 접근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경협은 통일비용을 미리 지불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진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이 미래의 한민족의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제도화’, 즉 국제적 보장체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자간안보협의체’의 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냉전이후시기에 동북아에 있어 러시아의 정정은 매우 불안정하며, 일본과 중국의 지역패권 경쟁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은 미국의 균형자의 역할은 만족할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도 안보 보장자로서의 미국

의 역할이 지속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다음 두가지 점에서 패권적 지도력을 떠 맡을 의지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sup>42)</sup> 하나는 클린턴 대통령의 당선에서도 이미 나타났듯이, 앞으로 20년 정도는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40년대와 50년대의 제2차대전과 냉전의 시작을 경험한 세대보다는 오히려 대부분 60년대 70년대의 시민권운동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데탕트 등의 사건에 의해 형성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외문제에의 개입에 회의적이며, 이 들보다 이전세대나 이후세대보다도 국내개혁에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낙관적인 세대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하는 미국 정치는 이전보다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냉전 종식 이전에는 소련이라는 명백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적극적이고 확장적이며 지속적인 대외적 역할이 국가적 생존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위협을 대신할 마땅한 것이 없어 대외적인 역할을 정당화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적 쇠퇴가 가속화 될 수록 미국이 세계적인 지도력과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은 점차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세력균형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가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앞으로의 세계는 경제면에서의 미·일·유럽의 삼극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유지 역할을 하려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능력이 점차 저하될 것이므로 안보 보장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은 가속화되고, 중국의 패권 추구 야욕도 점증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도 핵확산 방지문제, 역내군축문제 및 해로문제 등 이슈별로 관련 국가들끼리 '안보레짐'

42) 이 점에 대해서는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9, No. 1 (Spring, 1994), pp.18-19 참조.

을 결성, 상호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내국간의 안보적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다자간안보협의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에서도 '아시아집단안보기구'를 결성하도록 한국은 모든 외교적 채널을 통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강대국간의 각축 속에 있는 약소국은 집단안보체제하에서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을 통해서 만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의 야욕을 저지시켜 남북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남북대화과 이를 통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진일보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의 냉전이후의 미국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정책변화 및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동안 실시해 오던 통일교육의 내용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서 분석하기로 한다.

## IV.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분석 및 문제점

### 1. 통일교육 성격의 변화

통일교육이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된 삶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이러한 통일교육은 8.15 해방과 함께 민족 분단을 맞으면서 추진되어 왔고 그 필요성도 인식되어 왔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주로 도덕과와 국민윤리과에서 행하여 왔다. 교육과정 시기별로 도덕교육에서 통일교육의 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sup>44)</sup>

교수 요목기(1945 - 1954)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반공교육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1954 - 1963)에는 도덕과의 내용은 도의교육과 함께 '반공·통일교육'을 포함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 - 1973)에는

43) 鄭世九, "統一教育의 實態와 問題點," 『社會科教育』, 第26號, 韓國社會科教育研究會, 1993, p. 13.

44) 교육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1994, pp. 35-46.

교육과정에 ‘반공·도덕 생활’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분쇄함으로써 승공통일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 - 1982)에는 반공·도덕 생활을 교과 활동에 포함시켜 그 명칭을 도덕으로 바꾸었다. ‘도덕과’는 5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다섯번째 영역이 반공 생활이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2 - 1987)에 도덕과는 4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네번째 영역이 반공 생활이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7 - 1994)의 도덕과는 다섯번째 영역에 통일·안보 생활을 두어서 “통일·안보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여 북한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적인 민족 공동체로 인식하는 등 좀더 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하였다.”

1980년대까지 통일교육을 되돌아 보면, 1950년대에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적대관계를 유지하였고, 1960년대에는 북한을 우리와 대결하는 상대로만 인식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북한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결의 상대이면서도 함께 대화를 통하여 민족의 장래를 논의해야 할 상대로 시각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대화와 대결의 상대로서 두 가지의 조화를 모색하였다.<sup>45)</sup>

제6차 교육과정기(1995 - )의 도덕과는 5차 교육과정기의 ‘국가 생활’과 ‘통일·안보 생활’을 ‘국가·민족 생활’ 영역으로 통합하여 통일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1980년대 초까지는 반공교육이 추가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통일·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안보교육의 성격이 약화된 순수한 통일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통일·안보교육에서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동족으로서의 북한 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자 하였다.<sup>46)</sup> 순수한 통일교육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이 중심이 되며,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시기별로는 제4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와 제5차 교육과정 시기 및

45) 같은 책, p. 46.

46) 白種億, “統一教育의 課題와 再定立 方向 探索.”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1992년 봄), p. 198.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통일교육의 성격, 목표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4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만을 보기로 한다.

다음에는 세 시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 2. 통일교육의 목표

### (1) 국민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별로 통일교육의 목표를 살펴본 후에 비교하려고 한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의 목표 진술을 두 학년씩 묶어서 하고 있다. 1·2학년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알고, 동족으로서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3·4학년에서는 “북한 공산당의 잔인성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고, 북한 공산당을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5·6학년에서는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른생활’에서 1학년은 “나라와 겨레에 대해서 긍지를 심어 주고,” 2학년은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을 싹트게 한다”고 되어 있다. 도덕과에서 3학년은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4학년은 “북한 사회의 실상을 통해 북한 공산 집단의 문제점과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며, 민주적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5학년은 “남북 분단의 문제점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6학년은 “북한 공산체제의 문제점과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자주 국방의식을 높이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 영역에서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학년 ‘바른생활’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의지를 다지게 한다”고 되어 있다. 도덕과의 3학년의 내용 영역 중 ‘국가·민족 생활’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5학년에서는 “평화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한

다.” 6학년에서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알고 동정심을 가지며, 북한 공산당의 잔인성을 알고 경계하며,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알며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북한 공산 집단의 문제점을 알고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한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문제점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자주 국방 의식을 높이며,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민족으로서의 긍지 및 평화 통일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학교 교육과정 도덕과의 목표 면에서 볼 때, 1980년대까지와 그 이후 1990년대 초까지를 비교해 보면, 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이전에 비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는 통일교육에서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통일교육은 조국애와 민족애, 한민족으로서의 긍지 및 일체감, 그리고 평화통일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 (2)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목표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국토 분단의 비극, 공산 집단의 만행과 북한의 현실과 공산 사회의 현실을 알고 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하며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거의 같으나 그외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민족, 문화를 사랑하고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 통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며 공동체 의식과 통일 국가의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동체 의식과 통일 국가의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제5차 교육과

정까지와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국민윤리(윤리) 과의 통일교육 관련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주려고 하고 있으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조국 통일의 당위성과 북한 공산체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이해하고 통일 과업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기르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1980년대 초 이전까지는 공산체제와 북한의 현실을 알게 하고, 우리 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킴으로서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후 1990년대 초까지는 반공교육에다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는 북한 주민들을 한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공동체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 3. 통일교육의 내용

#### (1) 국민학교 교육과정

교수요목 시기의 국민학교에서는 초등 공민과 함께 국가 통일 안보 생활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시 생활 독본이 추가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교과서에 통일 안보 생활, 즉, 공산주의 비판과 국방 안보 내용이 등장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방 안보, 공산주의 비판 또는 북한 현실 비판에 강조점이 두어졌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공산주의 비판, 국방 안보와 북한 현실 비판이 강조되었다.<sup>47)</sup>

제4차 교육과정 이후의 시기별로 국민학교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의 변화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제4차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 내용의 특징을 보면, 비참한 생활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동정, 억압과 통제, 독재정치, 민족문화 말살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공산당의 위협, 간첩과 무장공비의 만행, 전쟁

47) 李在鳳, “韓國政治教育 發達の 體系的 分析研究.” 教育學 博士學位 論文, 서울大學敎 大學院, 1991, pp. 152-154.

준비, 잔인성 등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며, 북한 동포들도 자유를 바라고 있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 1〉 국민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의 변화

구분 학년별	제4차 교육과정(1981. 고시)	제5차 교육과정(1987. 고시)	제6차 교육과정(1992. 고시)
1	(1) 북한 어린이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한다. (2) 북한 공산당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안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고, 동정하기	
2	(1)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동정한다. (2) 간첩과 무장공비들의 만행을 경계한다.	북한 보다 잘 사는 우리의 생활 알기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태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 지키기
3	(1)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한다. (2) 북한 공산당의 무력도발을 경계한다. (3)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긍지를 가진다.	(1)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민족 (2)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과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3) 6.25남침과 그 이후의 도발 사례	다른 사람 의견 존중 분단 현실의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4	(1) 북한 주민들은 억압과 통제 속에 살고 있음을 안다. (2) 북한 공산당의 전쟁준비를 경계한다. (3) 남북 분단은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을 안다.	(1) 우리의 생활과 북한 주민의 생활 (2)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들 (3) 통일을 해야하는 까닭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

구분 학년별	제4차 교육과정(1981. 고시)	제5차 교육과정(1987. 고시)	제6차 교육과정(1992. 고시)
5	(1) 북한 공산당은 독재 정치를 하고 있음을 안다. (2) 북한 공산당의 잔인성을 알고 경계한다. (3) 북한 동포들은 자유를 바라고 있음을 안다.	(1) 남북 분단의 아픔 (2) 우리 나라의 안보와 우리들의 생활 (3) 평화적인 통일과 무력에 의한 통일	평화통일의 방법
6	(1) 공산주의는 모순된 제도임을 안다. (2) 북한 공산당은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있음을 안다. (3)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공산체제의 문제점 (2) 자주국방의 자세 (3)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통일을 위한 노력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 남북 분단의 아픔, 우리 생활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비교, 우리나라의 안보, 평화적인 통일과 무력에 의한 통일, 자주국방의 자세, 평화통일을 위한 자세들을 강조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북한 현실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염원,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 통일의 방법,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과정상에서 통일교육 내용의 차이를 보면, 제4차 교육과정 시기(1980년대)까지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 주고 경계하며, 북한 주민들의 비참하고 억압된 생활에 대한 동정심 및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 주로 강조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 시기(1989 - 1994)에는 남북한의 주민생활 비교를 통해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심어 주고,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의 자세를 강조하며, 특히 3학년에서 '함께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4차 교육과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6

차 교육과정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교육내용으로서 순수한 의미의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수요목 시기 부터 제3차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통일교육 내용의 강조점은 국민학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48)</sup> 제4차 교육과정 이후의 시기별로 중·고등학교의 도덕과와 국민윤리(윤리)과의 통일교육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중학교 도덕과의 통일교육 내용을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교육과정별로 차이를 보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서 북한의 현실, 2학년에서 공산 사회의 현실, 3학년에서 평화 통일의 의지로 나누어 다루면서 북한 공산 집단과 공산국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평화 통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분명한 구별을 하지 않고 <통일·안보 생활>에서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문제점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한의 비교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서 애국심과 민족애 및 민족의 발전을, 2학년에서 민족 분단의 원인과 배경, 북한의 현실을 알게 하며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3학년에서는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국가의 실현 및 세계속의 한국인까지도 다루고 있어서 바람직한 통일교육 내용이 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해 발간되어 1989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1994년도까지 사용된 1학년 도덕과 제5단원 <국토 분단과 북한의 현실>의 내용은 민족의 비극,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다루고 있다. '민족의 비극'에서는 6·25 전쟁의 과정과 책임 및 아직도 계속되는 비극을 다루고 있고, 6·25전쟁 이후 북한의 간첩과 무장 공비 침투와 만행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사회·문화의 이질화 현상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소단원 '우리의 나아갈 길'에서는 "먼저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민족정신과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끝을 맺고 있다.

48) 같은 글, pp. 152-154.

〈표-2〉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의 변화

구분 학년별	제4차 교육과정(1981.12. 고시)	제5차 교육과정(1987.6. 고시)	제6차 교육과정(1992.6. 고시)
1	<p>〈북한의 현실〉</p> <p>(1) 국토 분단의 원인과 교훈</p> <p>(2) 북한 공산 집단의 정치 현실</p> <p>(3) 북한의 경제적 현실</p> <p>(4) 북한의 사회·문화 현실</p>	<p>〈통일·안보 생활〉</p> <p>(1) 국토 분단의 원인과 현실</p> <p>(2) 북한 공산 집단의 끊임없는 도발</p> <p>(3) 자주 국방의 의지</p> <p>(4)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생활 비교</p>	<p>〈국가·민족 생활〉</p> <p>가. 민족의 발전과 문화 창달</p> <p>나. 애국심과 민족애</p> <p>다.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p>
2	<p>〈공산 사회의 현실〉</p> <p>(1) 공산 사회의 특성</p> <p>(2) 공산국가의 침략 정책</p> <p>(3) 공산국가의 침략 사례와 그 교훈</p>	<p>〈통일·안보 생활〉</p> <p>(1) 조국 통일의 당위성</p> <p>(2)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음모와 우리의 안보 극복</p> <p>(3) 통일 장애 요인과 그 극복</p> <p>(4)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p> <p>(5)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p>	<p>〈국가·민족 생활〉</p> <p>가. 민족 분단의 원인·배경</p> <p>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현실</p> <p>다.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문제점</p>
3	<p>〈평화 통일의 의지〉</p> <p>(1) 통일의 염원과 통일의 의미</p> <p>(2)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p> <p>(3)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야욕</p> <p>(4) 민주적 평화 통일과 우리의 자세</p>	<p>〈통일·안보 생활〉</p> <p>(1) 오늘날의 국제 관계, 이념 대립 문제</p> <p>(2) 공산국가들의 공산화 과정</p> <p>(3)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p> <p>(4)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p>	<p>〈국가·민족 생활〉</p> <p>가. 민족 공동체의 번영</p> <p>나. 통일 국가의 실현</p> <p>다. 세계 속의 한국인</p>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사용된 중학교 2학년 도덕과의 제5단원 '평화통일의 의지'에서는 조국통일의 당위성, 우리의 통일 정책, 북한의 통일 정책, 통일을 위한 자세를 다루고 있다. 조국 통일의 당위성에서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본래 모습 회복, 분단에 따른 고통 해소, 민족적 역량의 결집, 전쟁의 불안 해소 등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정책을 다루고 있는 소단원에서는 우리의 통일 정책의 정당성을 심어 주고 북한의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도덕과의 제5단원은 '공산주의 이론과 현실'이다. 여기서는 공산주의 이론의 특징,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 공산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특성, 공산권의 변화와 우리의 자세 등 4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국민윤리(윤리)과의 통일교육 내용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공산주의 이론과 현실, 국제 정세와 한반도, 북한 사회의 특성, 북한 공산 집단의 침략 정책, 우리의 통일 정책을 다루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토 분단의 과정, 북한 공산체제의 현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다루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발간되어 1990년도 3월 1일 신입생부터 1995년까지 사용된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 제5단원 '조국의 통일과 변영'에서는 조국의 분단, 북한 공산체제의 현실, 통일을 우리의 노력 등 세 단원으로 나누고 있다.

'조국의 분단'에서는 조국 분단의 배경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북한 공산체제의 현실에서는 북한 체제의 특징과 변화를,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는 조국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 체제의 특징에서 북한 체제는 1당 독재체제이고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이며, 조직사회이고 통제사회이며 계급사회이고 착취사회이다라고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함께 살아야 할 화합과 포용의 대상이고, 국가 안보적 상황에서 보면 경계해야 할 실체라고 기술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에서도 우리의 통일 정책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통일정책은 목표면에서 공산화 통일을, 주체면에서 계급의식 고취를, 원칙면에서 공산

화 정권 수립을, 과정면에서 남한에서의 혁명에 의한 연공(聯共) 정부의 수립을 상징하고 공산화 통일이 되는 것을 최종 단계로 보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민족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중학교의 도덕, 사회, 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일교육의 실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sup>49)</sup>

우리 나라의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정치 영역을 통하여 접근되었다. 정치 영역 내용들의 특색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들에 대한 소개 및 홍보, 둘째 북한의 통일 논리에 대한 비판과 분단의 책임 전가, 셋째 남한 체제의 우월성 강조, 넷째 통일에 대한 접근 태도에 관한 내용들이다. 개인적 차원의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는 북한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현실에 관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 내용들은 북한 사회가 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폐쇄성을 개인 생활의 차원에서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 생활의 비참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다. 통일에 대한 민족주의적 당위성을 강조한 내용들은, 첫째 우리 민족이 우수하며 민족 단결을 통해 강력한 국가적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 둘째 외세에 대한 경계의 내용, 셋째 북한이 민족 통일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 4.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단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남북한에서 시행되었던 통일교육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sup>50)</sup>

제1기('45 - '50년대초)는 남북한이 각기 민주적 민족교육과 공산주의 모방기로 분류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각기 제시된 이념에 비해 내용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일종의 교육 준비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제2기('50 - '60년대초)는 우리의 민주시민교육과 북한의 계급 교양의 강조, 대립되

49) 申正鉉·申龍澈·權五定, 『統一時代の 民主市民 教育論』(서울: 探求堂, 1994), pp. 386-400.

50) 추병완,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학교 도덕 교과서 체제 개선 및 편찬 방향 연구," 『道德國民倫理科教育』, 第3號, 韓國道德國民倫理科教育學會, 1992. 7., pp. 188-189.

는 시기이다. 우리는 도의, 도덕교육을 국정 교과로 지정하여 반공교육을 강화한 때이며, 북한은 계급 교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한 때이다.

제3기('60년대 - '70년대초)는 우리가 민주교육에서 민족교육으로 전환한 시기로서 민족 주체성과 국력 배양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혁명 전통 교양과 김일성 유일사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주체' 확립을 시도하였다.

제4기('70 - '79년)는 국민윤리교육이 강조되는 등 우리의 민족주의 교육이 더욱 체계화된 시기이며, 남북 대화를 추진하면서 통일 안보교육 지침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신격화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교육 테제'를 발표하였다.

제5기('80 - '87년)는 우리가 우리가 국민정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조한 반면에 북한은 권력 세습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 때이다.

제6기('88 - 현재)는 우리가 통일교육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기존의 수세적 통일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함에 비하여, 북한은 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세습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남북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단 이후의 이데올로기적인 대결 논리에 입각하여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부정적인 관점을 심어 주고 반면에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심어 주는 교육을 해온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분단을 고착화하는데 기여하거나 자기 체제를 중심으로 흡수통일을 하기 위한 교육이 된 것 같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통일교육의 문제점만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지난 45여년간 반공교육의 한 하위영역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종래의 경색된 반공교육의 이미지를 현행의 통일교육에 투사시키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 이런 인식은 교육 밖의 사람 뿐아니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도, 교과서 집필자도 그런 인식에서 아직 충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하면서도 이들은 종래의 반공교육적 색채를 벗어나려 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sup>51)</sup>

과거 반공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sup>52)</sup>

① 국민들의 반공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적절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② 반공교육에서 대북 경계심과 통일의지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③ 북한과 공산권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의 변화 양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④ 너무 현실 문제에 집착한 결과 과정상의 문제를 소홀히 하였으며, 북한의 실체를 도외시하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였다.

둘째, 통일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은 남북간의 이질화 극복과 동질성 회복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거의 개발되지도 못했고 따라서 실제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1980년대 통일안보 교육적 통일교육에서 1990년대의 순수한 통일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통일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학교 통일교육이나 사회 통일교육 모두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형성과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실제 지도 내용에는 그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sup>53)</sup>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발간된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1학년에서는 공동체 의식 형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대한 내용은 5단원 마지막 소주제인 '우리의 나아갈 길'에서 "이질화를 극복해야 하고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2학년에서는 통일의 의미를 기술하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과 하나의 민족 공동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3학년에서는 5단원에 '민족 공동체'라는 소단원이 있다. 여기에서는 민족과 민족의식, 우리 민족의 정기, 민족 공동체의 발전 등을 다루고 있으나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빈약한 것 같다.

51) 文龍麟·朴容憲, 「南北統一에 對備하는 教育方案」, 教育政策諮問會議, 1990. 9., p.24.

52) 白種億, 앞의 글, pp.197-198.

53) 정세구, 앞의 글, p.21.

1990년 3월 1일부터 1995년까지 사용된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서도 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대해서는 간혹 언급은 되고 있으나 소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고 추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다.

셋째, 통일교육에서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 대한 지적 전수는 충분히 되고 있으나 양측의 주장과 입장에 대한 평행적 안내를 시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면밀한 상호 비교나 절충 방안 모색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현행 통일교육은 통일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sup>54)</sup>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발간된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우리의 통일 노력과 북한 공산 집단이 노리는 통일이라는 주제를 소단원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서도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하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우리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북한의 통일정책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종래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교육이고 그 내용도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남북한 모두가 상대편 사회는 사람이 살기 힘든 사회임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 왔다. 남한은 북한을 괴뢰 도당이고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켜왔으며, 북한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착취 당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과 선전을 해왔다. 학교 교실이나 복도에 있는 반공코너나 게시판에는 북한의 각종 만행과 도발상을 게시하여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 보다는 외국 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고 원수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 온 감이 있다.

북한에 대한 소개와 설명에 있어 충분한 자료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객관적 시각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북한 대결 체제 속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책적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진 북한 현실에 대한 교육은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편견을 내포한 경우들이 있었다.<sup>55)</sup>

54) 같은 글, pp.22-23.

55) 신정현, "대학생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대학 통일문제연구소장 토론회 발표자료, 통일원, 1993. 12., p.11.

## V. 통일교육의 과제

먼저 독일의 통일과 그에 관한 교육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sup>56)</sup>

첫째로 꾸준하고 치밀한 준비는 교육을 통해서 각급 학교나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야 한다.

셋째로 분단의 역사성과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가급적 객관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로 갑자기 닥칠 수도 있는 돌발적인 사태로서의 통일에 대한 교육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델의 통일과 통합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통일교육의 과제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반공교육적인 색채를 탈피하면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요청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시에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교과서 집필자의 선정을 잘 해야하며 사전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도덕과와 윤리과 교사들의 재교육이 요청된다. 그리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도덕과와 윤리과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육 강좌를 반드시 두어서 민족애를 가진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통일교육의 핵심 과제인 민족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먼저 남북간에 이질화를 촉진시킨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제를 비교하여 그 상이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남북한간의 이질화 현상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남북한간에 동질성이 있는 기층문화를 발굴하여 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

56) 申正鉉·申龍澈·權五定, 앞의 책, p. 379.

북한에는 아직도 조상숭배의 전통이 남아 있어 장사와 제사를 지내고 묘도 쓰고 있으며 민족의 명절도 지켜오고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상부상조하는 전통도 지켜오고 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성도 지극하며 효도하고 우애하는 풍습도 여전히 생활화되어 있다.<sup>57)</sup>

민족 공동체 형성 교육은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동질성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를 재확인하고 유지 발전시켜나가면서 남북한 동포 사이에 내재해 있는 적대감과 이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이라는 '우리 의식'을 확산시키면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형성될 민족 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 공동체 형성 교육의 내용은 민족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문화적 이질성과 동질성,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통일문화의 창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sup>58)</sup>

셋째, 통일교육에서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말고 서로 비교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며, 양쪽의 주장 중에 절충할 점은 없는지 찾아보게 함으로써 통일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처음부터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교육을 한다면, 남한의 통일방안은 무조건 옳다는 도그마를 심어주는 교육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받아드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도는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통일교육에서 인지적·정의적·행동적 방법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지적 수준이 낮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정의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가능한 북한 주민들은 같은 민족이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할 동포라는 것을 느끼고 받아드릴 수 있도록 감정에 호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기층문화는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거나 교실이나 복도에 '민족 공동체' 코너를 만들어 자료를 게시하여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57) 통일원, 「통일교육 기본 방향」, 1995, p.121.

58) 김향원, "統一教育의 方向 模索," 「大學 統一·北韓問題 學術論文集」 (서울: 統一院, 1995), pp. 82-83.

해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는 점차적으로 인지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통일문제에 대하여 이해를 시키면서 보충적으로 정의적, 행동적인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동적인 접근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게 하거나 웅변대회 등을 활용하는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접근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한다면, 인지적 접근인 강의식 수업 보다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 민족이고 같은 동포”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더 많이 변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가능한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스스로 판단를 해 보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이나 지배층의 의도에 의해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는 교육 전체가 불신당하고 역효과가 나타남을 과거의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남북한의 자료와 정보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독일의 통일교육에서도 좋은 실례를 찾을 수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평화통일의 요인이 되었다. 독일 정치교육은 시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비판력 및 판단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치 참여를 통한 사회의 민주화 및 인간화에 기여함으로써 서독 체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하였기 때문이다.<sup>59)</sup>

## VI. 결 론

지금까지 냉전의 종식으로 야기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의 변화를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과제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냉전이후시대에 군사력의 역할이 점점 저하되고 미국의 경제력도 상대적으로 약화되

59)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p. 89.

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도력에 입각하여 세계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유화적인 '북한포용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를 북미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과 미묘한 마찰도 노정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 미국은 한국의 의사를 고려하면서도 독자적인 대북접근의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미간의 사전협의 등 대북공조체제를 미국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대북접근 및 관계개선에 대해 좀 더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대북수교로 인해 분단이 고착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놓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좀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북미수교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어 책임있는 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북한의 개방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미안보체제의 결속은 매우 필요하며, 안보면의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북미수교를 계기로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도 이루어져 명실공히 4강에 의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고 남북한과 주변4강이 합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도 적극적 의미의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관련국끼리의 '다자간안보협의체'의 결성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장기적인 면에서 '한미방위조약'을 보완할 수 있는 있는 다자안보레짐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패권이 쇠퇴할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 등 현상변경이 올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자위력을 신장시키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를 통하여 안보를 보장받고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이질화를 극복해 나간다면 북한 체제도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진일보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심각한 식량난과 탈출자들의 속출

등 북한의 국내사정이 너무 불안하여 줄지에 붕괴되는 사태도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다.

냉전의 종식은 우리의 통일교육의 내용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그것은 통일교육이 반공교육적인 면을 탈피하여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을 같은 민족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동질성 회복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동포 사이에 내재해 있는 적대감과 이질감을 해소하는 내용의 교육,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우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어 스스로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서독의 통일교육이 시민들의 비판력과 판단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통일교육도 자율적이고 참여적이며 인간적인 참다운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